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10/20℃ 목포 10/18℃ 여수 11/18℃
단기 4342년 (음력 9월 1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15호 1판 2009년 11월 5일 목요일

긴급진단 **돈선거 온상 조합장 선거**

‘돈=당선’ 의식 팽배 3곳 중 1곳 불·탈법

농협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혼탁하다. 조합 3곳 중 1곳이 금품 제공 등으로 적발되는 등 고질적 금품 살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5년 7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서 ‘돈맛’ 들인 유권자들의 행태가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든 선거 비리의 씨앗인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선거를 통해 그 실태와 대책 등을 모색해 본다.

1 광주·전남 실태
2 기본이 3억
3 조합장이 뭐길래
4 대책은 없나

농협과 수협 등의 조합장 선거가 ‘불법 돈 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올들어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3곳 중 1곳이 금품 제공 등으로 적발되는 등 불법·탈법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에서 치러진 76개 조합장 선거에서 서광주농협 등 28개 조합에서 40건의 불법·탈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선거가 치러진 7곳 중 절반이 넘는 4곳에서 6건이 적발됐다. 전남에선 69곳 가운데 24곳에서 34건의 불·탈법 행위가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 중 금품 제공 등 8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12건은 수사의뢰 그리고 19건은 경고 조치했다. 사례별로 보면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전체 40건 중 21건으로 절반을 넘어 ‘돈 선거’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광주지검도 올해 농협 임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4명을 적발, 7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제공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12명, 후보자 매수 4명 등으로 대부분 선거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2일에도 화순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A후보자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수십만원의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주고 후보자의 출마지역을 조정하거나, 선관위가 조합원 전체에게 ‘자수 권유’를 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영광 G농협은 지난 1월 임원 선거 과정에서 이사 후보자들에게 돈을 주며 다른 지역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고 조정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3월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원에게 30만원씩 활동비를 제공한 후보자와 이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8명 등 1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조합원 3천865명에게 ‘자수권유 안내문’을 발송, 자수를 권유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탈법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이 되면 ‘지역 유지’로 대접받으며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출마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또 ‘하려고만 한다면’ 인사·사업계약·대출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좋은 자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이 많지 않아 일부만 ‘포섭’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고, 도·농 복합지역이나 조합 통합지역의 경우 주민들간 알력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것도 불법·탈법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출마자·유권자들 도덕 불감증 만연
경쟁자에 돈주고 “타지역 출마하라”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2005년 선관위 위탁 관리이후 조합장 선거문화가 점차 깨끗해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선거기간이 짧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조합원이 많지 않은 점 때문에 후보자들이 돈으로 표를 사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젖먹던 힘 다해 달려라 4일 나주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열린 ‘2009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동료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400미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최인기 국회의원, 박재만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소방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종플루, 휴교만이 능사 아니다”

11일부터 백신 접종 … 안병만 장관 예방철저 지시
국방부, 장병 면회·외출 금지, 예비군훈련도 중단

신종 인플루엔자의 학교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대책회의가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6·9면〉

이날 회의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학교 내에서의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병만 장관이 직접 주재하면서 시·도·학교별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학생들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11일부터 시작되고 접종을 받으면 1~2주 내 면역이 생긴다고 하므로 결국 이번 한달이 고비”라며 “한달 동안 철저히 대비하고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관리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학교 휴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직접 학교에 가보니 많은 교장들이 ‘휴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휴교가 능사가 아니니 잘 판단해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12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공정한 시험관리 대책, 특히 신종플루 감염 학생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안 장관은 “플루에 감염된 학생들은 별도 교실에서, 증상이 심한 학생들은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수능이 아무 문제없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 5일부터 이달 말까지 계획된 예비군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장병 면회, 외출, 외박은 사실상 금지하되 부대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종시 최종안 내년 1월 제시”

정운찬 총리 “민관위원회 구성 여론 수렴”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축소와 관련, “가급적 내년 1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정 총리는 4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과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11~12월 중 의견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내년 1월말까지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되는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총리실장과 민간 명망가 15명 등 모두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정 총리는 다음주까지 민간위원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단장을 맡고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과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각각 설치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며 세종시 대안 3대 기준으로 ▲국가경쟁력 ▲통일이후 국가미래 ▲해당지역의 발전 등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